

동성애와 사상

동성애 성혁명과
정상·비정상의 경계 허물기
- 규율적 도덕의 해체는
진보가 아닌 인권의 종말이다



●이정훈 교수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 정책연구원(ELI) 원장이다.

‘동성애’ 행위를 중심에 둔 성정치-성혁명 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허물기”라는 매우 위험한 명제를 논의하는 것은 꽤 유익하다. 프란시스 웨퍼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했다. 만약 나이 많은 거동이 불편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다. 우리는 이 여성이 길을 잘 건너도록 도울 수 있다. 아니면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서 빠르게 도주할 수도 있다. ‘샤르트르’나 ‘까뮈’같은 실존주의자에게 두 행위는 모두 “행위의 의지”를 실행한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철학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된다.

우리는 지적 우월감에 취해 실존주의를 찬양하다가도 (역설적으로) 실존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인간의 관점에서 윤리적 판단의 상황에 직면할 때 무언가 불편함을 느낀다. 다시 말해, 유창하게 논증할 수 있는가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이들의 철학을 그냥 이상하게 느낀다. 키에르케고르 이후 하이데거를 포함해서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푸코도 자신이 뭐라고 항변하든 이 사조를 강화시킨 인물임이 분명하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비정상을 억압하는 권력의 기제”라는 명제는 참 탁월해 보인다.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권력의 속성이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침해적일 때 이를 교정하는 것과 아예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도덕을 해체하자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우리 세대의 포스트 모던 광풍은 도덕과 정상의 기준을 해체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 거대담론을 “해체”하자는 담론이 바로 거대담론 아닌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자!”라고 말했을 때 이 발언은 이미 “무엇이 착한 행위인가?”라는 논쟁을 건너뛰어 그 자체로 ‘넌센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 아마 혹자는 필자의 설명을 다 읽기도 전에 흥분해서 “이 자는 나치다,” “어떻게 동성애를 착하지 않은 행위나 노상강도와 동일시하는가? 이것이 바로 혐오다”라고 읽는 행위를 중단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동성애 행위가 도덕적으로 노상강도나 착하지 않은 행위라고 가치평가를 한 적이 없다. 동성애라는 행위가 권리가 되어야 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용인하고 헌법과 민사법 전반을 혁명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철학적-사상적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허물기”라는 명제의 위험성과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하는 넌센스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도덕이 해체되어 사라지면 동성애라는 행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인권의 본질을 부정하게 된다. “인권”은 도덕에 기초하여 존재한다. 인권은 “도덕적 권리”에서 출발해서 “법적 권리”로 구성된다. 여기서 **성정치 혁명가들의 성자로 격상된 푸코의 이론**을 잠시 검토해 보자. 그가 바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무는 데 기여한 철학적 거물이다.

푸코는 자신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보는 시각을 거부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푸코를 해체주의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로 지칭하는 것도 부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든지 68혁명 이후 형성된 신좌파의 이론 지형에서 푸코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푸코의 철학은 해체주의나 후기구조주의로 부를 만한 요소도 포스트 모던이라고 표현할 요소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푸코는 ‘주디스 버틀러’로 상징되는 “퀴어 이론”의 철학적 연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푸코는 권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권력을 하나의 실체, 하나의 소유물로 바라보았다고 비판한다. 권력을 실체로 보게 되면 국가의 전복 및 혁명, 의회정치, 대통령 선거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것은 진짜 정치이고, 개인의 정체성 투쟁 (가령, 동성애, 장애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 페미니즘)의 담론은 거시적 정치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푸코는 권력을 근본적이고 미시적인 일상의 문제로 본다. 거시적인 것은 미시적 권력들의 효과로 드러나는 권력 현상의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좋은 학벌을 가진 남성들로 구성된 대법원을 생각해 보자. 대법원이라는 거시적인 정치의 대상은 가부장적이고 학벌을 중시하는 일상적 권력 관계들이 수없이 중첩되어 나타난 가시적 현상이다.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의 대상들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것이다.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거시 권력의 정치 현상은 미시정치에서 출발한다.

푸코가 거시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권력에만 집중하게 되면 미시 권력의 다양한 저항 지점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거시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동기나 이유도 일상의 미시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권력’을 양도하거나 탈취할 수 있는 경제적 소유물로 보았다. 푸코가 자신의 권력-지식론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경제주의적 권력론이다. 권력-지식론은 “지식은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지식은 권력에 초연해야 한다” 등의 전통적 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이다. 권력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담론 또는 비담론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적 상황의 총체이고 관계(권력관계)의 문제가 된다. 권력은 단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권력의 차원에서 무한하고 다양한 복수의 권력 관계들을 만들어 낸다.

푸코는 자연적 생명이 국가권력의 매커니즘과 전략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정치가 '생명정치'^{bio-politique}로 변화하는 과정을 탁월하게 분석했다. 푸코는 개인이 살아있는 신체라는 의미로 정치 전략의 중요한 대상이 될 때 그 사회가 '생물학적 근대(성)'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푸코는 1977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를 통해 '영토국가'에서 '인구국가'로 이행되고, 생물학적인 생명과 국민 건강이 주권 권력 특유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승리는 일련의 적절한 기술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이른바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해 낸 새로운 생명 권력의 규율적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푸코의 탁월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생명 관리정치의 규율 권력이 순종하는 신체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기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정치와 제도의 진보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을 보장하는 그 제도와 자유주의 정치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인권의 진보가 아니라 인권의 종말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은 이렇게 인권의 진보가 아니라 인권의 부존재 상태로 급진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마오와 김일성의 혁명을 상고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라는 행위를 전략 전술로 앞세운 '성혁명'은 결국 동성애자의 권리를 포함해서 인간의 권리가 존재하는 제도와 도덕의 기초를 해체할 수 있다.

가부장적 '미시권력관계'에서 출발한 대법원의 정치적 속성을 인지하고 그 구성을 개선하는 것과 대법원 자체를 제거하고 해방을 외치는 것은 다르다. 다시 쉼퍼로 돌아가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진리는 존재한다. 도덕적 기준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생존의 기반이다. 그 기준의 적용과 제도화를 개선하는 것이 진보이지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도 없다는 수용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인권의 종말이다.

